

韓國社會에서 民主主義의 危機와 政治統合의 限界

新支配勢力形成의 民主主義의 意味

陳 德 奎

- | | |
|--------------------------------|-----------------------------|
| I. 問題의 提起 | IV. 韓國에서의 新支配勢力形成과 民主主義의 危機 |
| II. 韓國에서 民主主義의 現實의 問題 | V. 結論: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 |
| III. 韓國社會에서 美國式 民主主義의 受容과 價値體系 | |

I. 問題의 提起

民主主義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政治制度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社會構造의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이제 民主主義는 마치 한 시대의 가치로운 制度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民主主義의 制度的 수용은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사회에서 절대적인 과제처럼 여겨졌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최대의 國家的 目標로 여겨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신생국가의 경우 그 社會文化의 進근대적 속성의 支配的 현상에도 불구하고 民主主義 制度 수용을 모든 기대와 열원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도저히 民主主義의 가치규범과 어울릴 수 없는 상황적 조건을 가진 사회에서조차도 民主主義를 정착시키기 위한 온갖 勞力이 경주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民主主義가 현대에서는 일종의 보편적 가치로 정립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의 현실적인 전개과정에서는 각 社會마다 서로 다른 차이를 보

1) 이러한 사실은 최근 마르크스主義의 사회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Boris Kagarlisky, "The Intelligentsia and the Changes" *New Left Review*, Vol. No. 164, pp. 5~26.

여주고 있다. 어느 社會에서는 民主主義制度和 연관될 수 없는 政治制度를 구축하면서도 그것을 民主主義라고 강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民主主義 전개를 위한 예비적 조처라는 자기 변명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²⁾ 民主主義 展開過程의 이러한 多樣함은 民主主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인식중에는 먼저 민주주의는 과연 보편적 價値體系를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인가라는 質問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로 民主主義가 그러한 보편적 價値體系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전개하는 制度的 장치도 보편적인 성격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두가지 問題를 전제로 할 때, 여기에는 자연히 非西歐社會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본래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는 제도적 변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아시아적 民主主義 유형”이라는 변이적 형태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³⁾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이 글의 기본적인 의도는 아시아 民主主義의 변용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한 한 事例로 한국에서의 民主主義의 존재양식을 考察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民主主義가 現實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변용적 속성이 어떠한가, 그러한 변용은 民主主義의 고전적 성격에서 어느 정도로 이탈된 것이며, 그러한 이탈은 민주주의와 완전히 별개의 存在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왜 한국의 民主主義가 그 고전적인 屬性과 유리된 類似民主主義로 歸着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는 것이다.

흔히 그러하듯이, 이러한 論議도 한국의 사례를 아시아적 유형의 대표적 성격으로 전치하게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可能性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2) 이러한 경향으로는 1960년대 초기의 東南亞의 몇몇 국가에서 보여주었던 교도민주주의라던가 기초민주주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3) 이 용어는 “Asiatic Pattern of Democracy”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곧 이 地域의 民主主義制度의 변용이 고전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 굳이 주장한다면 이 글 자체가 본래 필리핀에서의 민주주의와 일본에서의 民主主義를 함께 비교 고찰하면서 그러한 比較論的 시각에 의하여 이른바 아시아적 民主主義 類型의 논리적 가능성을 설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위한 부분적인 연구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韓國에서 民主主義의 現實的 問題

한국의 政治는 民主主義 政治制度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⁴⁾ 지난 한세기 동안 한국인의 民主主義에 대한 국민적 환상은, 가깝게는 40여년동안 민주주의로의 지향은 긴 시행착오의 過程을 경과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民主主義에의 시도는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의 本質과는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民主主義라는 이름으로 분장했던 시기도 있었고, 때로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特異한 성격을 강조하였던 시기도 있었다. 어느 경우에서나 한국에서의 지난 반세기의 정치사는 바로 民主主義 그 자체를 위한 시행착오의 시기였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는 고전적인 가치의 본질과 차이를 보여주는 유사적 形態로 존립하고 있는 형편이다.⁵⁾

이러한 事實을 전제로 할 때 한국에서의 民主主義의 기본적인 問題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發展되기 어려운 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속에 어떤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과연 어떠한 要因이 한국에서의 民主主義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이들 문제를 인식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한국사회에서 現實적으로 민

4) 韓國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사회의 基本的 目的이 되었으며, 그것이 곧 정치의 모든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主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게 되었다.

5) 道義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것을 참고하였다.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민주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어느 사회에서나 민주주의의 현실적 問題點을 인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이 기준이 되어 고찰될 필요가 있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첫째, 民主主義的 國民통합의 실제적인 過程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둘째, 政策決定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로 그 사회에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셋째, 정치지도체계의 승계에서 民主主義的 原則이 어느 정도로 기능하고 있는가, 넷째, 民主主義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國家發展의 구체적인 동력체로 機能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네가지 문제는 자연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認識課題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통합이나 정책결정과정, 지도자의 승계, 국가발전의 문제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사회와 民主主義의 연관성이 한계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 國民統合의 制度的 限界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일차적인 지향의도는 國民을 효과적으로 政治統合 하는데 있다.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간의 갈등이나 對立을 극복하면서 정치적으로 하나의 터전에서, 이기고 지는 勝敗의 場에서 벗어나 함께 승리가 되게 한다는 理想的 前提가 민주주의적 가치체제임을 考慮한다면 民主主義야말로 바로 정치통합을 추구하기위한 제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政治統合은 議會主義로 表출된다.⁶⁾ 의회주의는 국민대표의 選出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選舉는 바로 정치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指導者를 선

6) G. Bingham Powell, Jr., *Contemporary Democracies: Participation, Stability and Viol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p. 11~12.

택하고 선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의 政治市民으로서의 귀속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주의를 政治統合의 기본적 제도라고 전제할 때 여기에는 또한 의회에서의 이익의 입법화과정도 역시 정치통합의 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政治統合의 구체적인 속성으로서의 선거와 입법화과정을 한국의 정치사회에 대입시키면 政治統合의 현실성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즉 한국에서의 선거는 정치적 통합보다는 분열과 반목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에서의 입법화과정은 特定利益集團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입법화이기 때문에 이는 자연히 다원주의적 경쟁성이 확립되지 못한 한국에서는 갈등과 투쟁의 한 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면 가질수록 갈등적 성격은 더욱 더 강화된다.

한국 政治社會에서 민주주의의 수용과 그것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선거와 입법화과정은 정치통합이나 국민적 일치감을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시켜 社會發展과 共同體의 존립에 위해적 상황을 조성시켜주는 실정에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의 결과는 자유당의 不正投票에 의하여 국민적 공분을 조성하며 마침내 4月 革命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 朴正熙와 尹潽善간의 대통령경쟁에서도 이른바 “정신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유행될 정도로 심각한 국민적 분노와 대립감을 조성시켰다. 박정희와 김대중간의 大統領選舉에서도 이러한 상태는 여전히 되풀이 되었으며 심지어 地域感情의 열풍에 의한 국민의 대립감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심지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조차도 이른바 “一盧三金”의 경쟁은 지역적 대립감정을 극도로 造成시켜 마침내 국민적 분열감정의 극단적인 현상으로 노출되고 있다.

7) 이러한 상황의 극단적인 表現이 총선거가 실시되고 난 이후의 선거소송이며, 이것은 대체로 전체 국회의원 총수(여기서 의미하는 총수는 13대까지의 선거와 의석수를 합친 것)에서 평균 27%의 선거소송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거사범의 숫자도 그러하다.

선거는 비단 대통령선거에서만이 아니라 地域區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국회의원의 선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연, 혈연, 학연등 온갖 일차적인 연대성을 기준으로 하는 갈등이 조성되었고 選舉結果는 한 지역 주민을 몇개의 파벌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民主主義의 수용과 그것의 전개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제도인 선거는 국민통합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갈등을 심화시켰고 분열을 조장시켜 정상적인 政治共同體로서의 기능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政策決定過程에서의 限界

한국에서 民主主義가 수용된 이후 정치통합의 정상성을 약화시켰던 중요한 또 다른 요소로는 民主主義的 정책결정과정의 비적실성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적 政策決定過程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듯이, 다양한 이익 집단의 이해를 조정 統合하는 과정으로 認識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정책결정은 그러한 성격과는 차이를 들어내 주고 있다.⁸⁾ 구체적으로 民主主義的 정책결정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의회에서의 정책결정이나 각종 행정부처에서의 행정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多樣한 利害의 조정과는 무관한 어느 일방적인 이익집단에 의한 다른 이익집단의 억압과 利益의 배척을 전개로 하는 특정이익의 독점화현상을 지배적인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정 법안의 결정은 그 법안에 의하여 損害를 감수하여야 하는 또 다른 집단이 있고 보면, 의회나 행정부에서의 법안의 결정은 바로 그것에 의하여 損失을 감수하여야 하는 다른 집단의 存在를 전제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政策決定過程에서 하향적 결정의 권위주의적 입법화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책결정이

8) 韓國에서의 정책결정은 현실적으로 잠재된 의도성과 表面的인 論理 사이에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 문제는 다음 것을 참고할 것. 安秉萬, “發展의 視角에서 본 立法府 行政府와의 關係”, 金雲泰 等著, 韓國政治行政의 體系, 博英社, 1982, pp.115~137.

政治的 성격울 중심으로 할 경우 더 한층 심각하게 展開되었다. 자유당 사기의 보안법 파동이라던가, 연이어 계속 閣행된 憲法改正案 통과 그리고 그밖의 정치와 연계된 각종 법안의 의회 통과는 항용 어느 일방의 強압적 인 제압에 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은 입법과정 자체가 국민의 利益을 調整한다는 민주주의적 지향과는 별개로 오히려 한 계급이나 集團에 強압적으로 부과하는 억압과정의 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입법과정은 어느 영역에서나 갈등이나 이해의 對立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키고 또다른 문제점으로 전이되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民主主義의 입법과정이 이처럼 그 본래의 성격을 외면한 체 단지 特定支配勢力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위장적 제도에 불과할 때 民主主義는 이미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그 나름의 일정한 적실성에 問題點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3. 民主主義와 指導者 承繼 問題

民主主義 정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적 기여는 권력의 합법적 승계와 유동화가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指導者의 정당성이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指導者의 등장에서부터 국민적 지지의 확보, 그리고 지도자들 사이의 정치적 경쟁을 거쳐서 마침내 權力을 장악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적으로 民主主義의 기본적 제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指導者 승계 문제는 한국의 정치, 특히 民主主義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적 정치에서는 오히려 큰 혼란과 가중된 對立의 조성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政治指導者의 대두 과정이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모두 民主主義的 절차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단지 民主主義的이라는 주장을 위한 자기 변명적인 성격이 되었음은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는 쉽사라

발견될 수 있는 일이기도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政治社會에서 국회의원의 사회구조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인사들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의 職業이나 社會活動에서 비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인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 이전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⁹⁾

1. 경제활동에 종사한 인사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中小企業體의 간부로서 활동한 경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은 政治를 單純히 그들의 經濟的 利益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제·정치 유착의 실제적인 상징이 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인사들은 국회의원 總數에서 38%를 차지하고 있다.

2. 高位 官職 경험—주로 행정부처의 고위관직자로 재직 한 이후에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경우로 이들은 政治的 活動에서 專門性을 부분적으로 발휘하지만 권위주의적 속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부류의 인사들로서는 軍 高位 將星 출신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국회의원의 점유비율은 약 14%이다.

3. 職業 政治人—직업 정치인은 한마디로 일정 직업을 가지지 못한채 처음부터 정치활동에 참여한 인사들로서, 이들의 活動으로는 주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라던가 무급 政黨員 그밖의 각종 政治團體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한국정치에서 일정한 政治勢力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치적 과행성을 조성하는 이른바 職業政治家의 주류가 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인사들의 비율은 약 10%에 해당된다.

4. 自由職 從事者—국회의원 이전의 사회적 경험중에는 변호사, 의사, 교수, 언론인, 작가등 일종의 자유직 종사자의 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政治的 性格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활발한 政治活動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속

9) 이 점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전까지의 개략적인 통계는 陳德奎, 韓國政治社會의 權力構造研究(1974)에서 그리고 최근의 성격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陳德奎, 韓國政治史研究序說(刊行豫定)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하는 인사들의 비율은 약 8%이다.

5. 기타 職業—그밖에 회사의 평사원이란다가 노동조합 지도자, 농업, 공업, 어업 종사자 그리고 無職 등의 인사들에 의한 국회의원의 점유비율은 대단히 미미하다.

위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지도자의 충원은 그 사회에서 보다 유능하고 성실한 국민적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조작적이고 동원적이며 파벌적인 상황의 한 표현으로 展開되고 있다.¹⁰⁾ 국회의원의 이러한 성격은 한국에서 民主主義가 지도자의 충원에서나 承繼에서 국민적 지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最高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가령 이승만의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초대에서는 국회에서 選出되었고 2, 3대에서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選出되었지만 그 選出過程의 정당성과 합법성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¹¹⁾ 장면의 경우도 4·19 이후의 政治的 변혁기에 야당세력에 대한 국민적 感情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접선거의 結果로 국무총리로 選出되었으며, 박정희의 경우에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고 그 뒤 選擧의 요식화 현상까지 보여주는 등 이른바 “체육관 선거의 대통령”의 양태를 보여주었다. 최규하의 경우도 이러한 범주에서 例外가 아니었으며 전두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민족적 經濟과 指導者의 자질을 가진 올바른 政治家를 選出하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의미라면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의 상황은 正反對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인 政治指導者의 부상을 극도로 제약하면서 정상배적인 정치가의 난무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 결과 사회發展이 저해되고

10) 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과 정치지향성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유럽의 경우 직업정치가의 충원이 일정기간의 수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령 영국 University의 P.P.E. 과정이나 프랑스의 E.N.A. 등이 여기에 속한다. G. Parry, *Political Elite*, 陳德奎 譯, 政治엘리트, 이대출판부, 1978, 참고.

11) 이 문제는 제 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강압적 분위기라던가 부정선거등에서 고려될 수 있다. 宋南憲, 解放三年史 I, 까치사, 1985.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까지 약화되는 狀況을 빚어놓았다.

4. 社會의 發展과 民主主義

한국에서 民主主義의 정착이 1948년의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였으며 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민주주의적 國家發展의 이념적 지향성이 설정된 일이 없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追求한 적도 없었다.¹²⁾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지배세력의 통치권을 合理化해 주는 명분으로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支配勢力에 저항하여 권력을 장악하려했던 이른바 야당세력의 정치투쟁을 合理化해 주는 것에 불과하였다. 현실성이 결여된 허상으로서의 民主主義가 난무하였다.

국가나 사회가 構成員에게 미래지향적 가치체계를 설정하여 이를 국민적 합의하에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未來志向의 價值體系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分析한다면,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는 이데올로기로서 自由民主主義를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反共에 충실하는 것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사정은 自由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기인된 면도 있으며 특히 이를 한낱 手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현대정치사는 정치적 志向價値를 결여한 혼돈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李承晩 집권기 : 이 시기는 國家建設期였기 때문에 국가의 志向價値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국가목표나 社會發展의 지향가치는 단지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에 그 가치를 두었다. 그것을 위하여 반공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최대의 國家課題로 설정되었다.¹³⁾

12) 韓昇助, 韓國政治의 指導理念, 書香閣, 1977, 第三章 “韓國政治의 指導理念”을 참고.

13) 당시의 정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의도적으로 결합한 것이 一民主義였

2. 張免의 민주당 집권기—이승만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발로 自由民主主義를 마치 부정부적인 방임상태로 생각했던 시기였다. 국가지향의 目標價値등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기간이었다.

3. 朴正熙 統治期: 이 시기는 近代化가 국가지향의 목표로 설정되었지만 사회의 지향가치로서는 파행적 성격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經濟發展이 국가의 당면과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인간다움의 공동체적 실현이나 社會發展의 총체적 지향이 결여된 면도 있었다. 경제위주의 발전추구는 한국사회에 심각한 정치 사회의 問題를 잉태하게 되었다.

4. 全斗煥 統治期: 이 기간은 박정희 통치기의 외연적 성격이 지배하고 있었다. 經濟成長의 목적이 명시되지 못했기때문에, 그리고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지배세력의 의도성이 내재된 추상적인 論理가 強調되다보니 자연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좌초되고 말았다.¹⁴⁾

결국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것이 인간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理解되기 보다는 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指向理念까지 喪失되고 말았다.¹⁵⁾ 민주주의만 이룩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는 비현실적인 환상론자의 양산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韓國社會를 이념면에서나 가치체계면에서 완전히 무규범적인 상황으로 전락되게 하였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이러한 성격은 결국 다음과 같은 논리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게 해준다.

첫째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것이 조성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경제

다. 梁又正, 李承晚 大統領, 獨立路線의 勝利, 獨立精神普及會, 1949.

14) 이러한 성격은 당시의 정치적 지향가치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념화로 정립하기보다는 구호적인 표현으로 정착시켰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정의 사회의 구현”과 같은 구호였다.

15) 그러한 성격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강조하였기때문에 民族主義와 같은 이념을 상대하고 약화시키고 말았다.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것을 참고할 것. 車基璧, 韓國民族主義의 理念과 實態, 1978. 崔相龍, 美軍政과 韓國民族主義, 나남, 1987.

사회적 기반과 무관하게 정치 지배세력의 權力掌握과 그 유지를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적 성격으로 지속되었다.

둘째로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은 민주주의가 수용되기 이전의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성격을 파괴하였으며 多樣性的의 意圖的 조성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社會的 葛藤을 심화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세째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적 지향성격을 수단으로 희생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 환상론을 대두시켰다. 이러한 幻想論은 정치세력에게는 정권지속을 위한 합리화의 장치였고 저항세력에게는 권력투쟁의 당위적 논리로 원용되었다. 그러므로 사회가 變革期에 처하게 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의 폭발로 인하여 非民主主義的 혼돈으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지배세력에 의한 강권적 폭력이 행사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Ⅲ. 韓國社會에서 美國式 民主主義의 受容과 價值體系

한국사회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수용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첫째, 한국에서 민주주의,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는 社會的으로나 傳統的으로 적실성이 있는 制度였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처럼 심각한 파행적 결과를 가져다 준 요인에 대한 문제이다.

韓國에서 민주주의의 認識의 論理的 類型

	純 粹 論	變 形 論
制度中心論	民主主義 誘導論	韓國的 民主主義論
經濟中心論	資本主義 必然論	民衆主義的 變革論

위의 두가지 質問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基本的인 질문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이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몇 가지 論理的 傾向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인식 觀點의 主要變數를 政治中心과 經濟中心論으로 설정하여 이를 결합시켜 보면 위의 도식이 가능하게 된다.

1. 韓國에서 민주주의의 認識論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논리는 각자의 觀點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이들 논리를 便宜上 두가지의 基本적 기준의 설정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민주주의를 인식함에 있어서 한국사회를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목적론적 觀點을 의미하는 純粹論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는 오직 한국사회의 발전과 共同體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보다 效果的인 制度이어야 한다는 논지에서 민주주의를 韓國化해 보려는 意圖性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논리가 민주주의 變形論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인식 기준으로서 민주주의를 단지 정치제도로 파악하는 제도주의적 인식관점과,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실제로 그것이 서 있는 사회 경제 문화의 토대위에 전개된다는 經濟主義를 設定할 수 있다. 이러한 認識基準을 서로 결합시키면 위의 도표에서와 같은 4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진다. 민주주의 유도론, 한국적 민주주의론, 자본주의 必然論, 민주주의적 變革論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논리들은 민주주의가 수용된 이후의 시대적 상황과도 깊은 關係를 맺고 있다. 가령 민주주의 유도론은 해방 이후 이승만의 집권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장이었으며 아직도 상당수의 주장자에 의하여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⁶⁾ 그리고 자본주의

16) 이 論理는 학문적으로는 사회과학에서 기능주의적인 성격과 결합되어 있음은 찾아 볼 수 있다. 陳德奎, 現代政治社會學理論, 三英社, 1988, p. 32.

적 필연론은 박정희 집권초기에 주장되었던 논리로서 자본주의적 경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한국사회를 민주주의로 귀일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민주주의론은 박정희통치시기의 中後半期에 나왔던 논리였다. 民衆主義的 變革論은 최근 한국사회의 진보주의적 주장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民主主義 誘導論 : 민주주의 유도론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민주주의는 現代社會의 가장 가치로운 정치체도로서 그것에 의해서만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는 그 제도적 장치나 이념적 가치에서 어떠한 變形도 不可能하며 만일 그러한 변형을 보여주었을 경우 그것은 이미 더 이상 민주주의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세째, 政治적으로 民主主義를 實施하게 되면 그것에 부수하여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가능해지며 사회도 근대시민 문화구조를 形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민주주의는 한 社會를 近代市民社會로 指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誘導의 制度라고 믿는다.¹⁷⁾

민주주의 유도론은 한국사회에서는 해방직후부터 右派에 의하여 특히 親美的 보수 세력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일체의 주장이나 思想 制度등은 모두 반시대적이고 반동적인 논리로 비판되었다. 이러한 인식론에 의하여 한국의 정치사회를 西歐的인 近代化에로 발전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는 자연히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하여 韓國社會를 變形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논리로 나아갔다. 민주주의, 그것도 미국식 민주주의만이 絶對的인 價値를 가지며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단일적이고 통합적인 전용적 文化構造조차도 多元主義의 樣式, 다시 말하면, 多樣性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적절한 발전요건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이를 추구하는 정책적 지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최상의 정치체도이고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이식하게 되면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

17) 한승주, "정치 : 민주화의 시련과 진로", 계간사상, 제 1집, pp. 56~80.

들은 自然히 解決될 수 있다는 지극히 안이한 관념에 젖어 있었다.

2. 資本主義的 必然論 : 이 논리는 주로 박정희 통치기에 주장된 産業化의 主張에서 나왔다.¹⁸⁾ 즉 민주주의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이 前提條件이 된다는 주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自由黨 時期의 민주주의는 지배세력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강화시켰고 시민적 권력을 극단적으로 억압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反動的 時期가 장면의 집권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부정부적인 정치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一般市民들에게 挫絶感을 가져다 주었으며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서는 결코 이룩될 수 없는 제도라는 여론조차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식속에는 절대적인 制度로 자리잡고 있었다. 支配勢力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를 국민들 마음속에 理想的인 制度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정치적 가치로 설정되었고 이를 위한 發展의 條件을 確立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이 資本主義的 必然論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必然的으로 到來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설명되었다. 그러므로 우선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에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 주장의 논리는 당시 朴正熙 統治體制의 주요한 이념적 논리로 설정된 근대화와 산업화의 명분론으로 기능하였다.¹⁹⁾

資本主義와 民主主義는 密接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因果關係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자본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위로부터의 革命”을 이룩하였던 獨逸이나 日本의 경우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발전은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적도 있었다.²⁰⁾ 卽 資本主義가 必然的으로 民主主義를 가져온다고 단

18) 韓昇助, “韓國民主主義의 國家論의 基礎” 韓國政治의 現代的 照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pp. 33~41.

19) 陳德奎, “韓國現代政治體系研究” 韓國社會變動研究 I, 民衆社, 1984 참고.

20) 트림버그, 김석근 역, 위로부터의 혁명, 학문과 사상사, 1982. 참조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나왔던 것은 당시의 정치 지배 세력의 통치에도 때문이었다. 支配體制를 確固하게 定立시키고 저항적인 野黨 政治人의 도전을 차단하면서, 당시의 軍部 支配勢力은 민주주의를 사실상 종식시켰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기변명의 논리를 필요로 하였다. 바로 이 요청에 부응하여 나온 것이 자본주의적 필연론이었다.

3. 韓國的 民主主義論 : 이 주장은 박정희 통치후반기에서 집권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權力維持와 그것의 장기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시하였던 논리였다.²¹⁾ 당시 反朴正熙勢力의 도전이 민주주의의 복원을 주창하면서 정치사회적 투쟁을 전개하자 이에 맞서서 박정희 등 지배세력은 그들의 통치를 민주주의에 의하여 僞裝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론의 주장으로 나타났다. 이 主張의 要點은 첫째, 민주주의는 普遍的 制度가 아니라 각 사회의 상황에 부응해야 하는 제도적 변용을 전제로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韓國社會에서의 민주주의는 한국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展開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전통으로 新羅時代의 和自이라던가 朝鮮時代의 鄉約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제도를 現代의 意味로 復活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는 특히 美國式 民主主義는 國家의 危機狀況에는 대응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일종의 국내외적인 위기에 처하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克服할 수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確立이 요청된다는 主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論理는 이미 그 속에 모순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이념의 普遍性을 무시하면서 단지 制度的인 差異만을 強調하는 地域的 特殊論理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국민의 人權保障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한국사회의 전통과 가치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적 이념의 자기화를 논의하였다면 한국적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었겠지만, 단지

21) 한국적 민주주의론을 일명 維新理念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다음 것을 참고할 것. 韓昇助, 韓國政治의 指導理念, 第四章, "維新體制와 韓國民主主義" pp. 122~146.

支配勢力의 政權유지를 위한 논리였다는 점에서 비판적 한계와 논리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4. 民衆主義的 變革論 :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국민적 통합을 가져 오기 보다는 분열을 조장하였으며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값하는 그 어떤 政治的 效果를 얻지 못하였음도 사실이다. 바로 이점에서 두가지 疑問點이 提起된다. 첫째, 민주주의는 전체 국민적 정치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의 疑問이다. 둘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보다 效果的으로 維持發展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이 두가지 質問은 自然히 既存의 民主主義에 대한 인식론을 강력하게 부정하게 되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단지 少數의 特權層을 전제로 하는 제도에 불과하며, 이는 바로 부르조와 민주주의의 한 典型일 뿐이라고 把握하였다.²¹⁾ 그러므로 대다수의 시민이나 대중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단지 정치적 參與의 義務主體일 뿐이지 권력의 향유계층일 수 없다는 사실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논리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政治와 經濟의 유착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부패와 부정의 난무를 가져왔고 그것은 政治적으로 強大國에의 縱屬性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民衆主義的 變革論이다.²²⁾

이 논리에 의하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중적 이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치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는 모든 민중의 自發적이고 主體的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중주의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이러한 民衆主義的 變革論은 또다시 그 논의의 주장자에 의하여 몇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差異點은 결국 民衆主義를 確保하는데 있어서 카우츠 키적인 方法을 動員할 것인지 레닌주의적 방법을 수용할 것인지의 차이에

21) 이러한 성격의 논지는 다음 책을 참고할 것. 퀴엘, 서사면, 백, 부르조와 지배체제론, 학문과 사상사, 1987.

22) 조희연 등 편, 한국사회 구성체논쟁, 竹山, 1989 참고.

서 연유되고 있으며 基本的으로는 부르조와 지배계급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克服하려는 特徵을 보여주게 된다.²³⁾

2. 傳統的 價値와 民主主義 聯關性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전개 양식과 그 破行的 性格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차이점을 보여지고 있지만 窮極의으로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적인면에서 그 적실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構造的 特徵과 傳統的 價値體系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사회의 변용이 제기된다면 이는 한국사회를 縱屬變數로 만들게 되며 민주주의를 절대시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자체의 변용은 흔히 지배세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統治의 合理化 論理로 기능할 여지가 있게 된다.

민주주의와 한국사회사이의 接合의 問題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의 논리적 전제가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政治思想的 가치체계를 수용하여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합일시키면서 이를 최대한 고양시킬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수용은 단순히 制度的 모방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민주주의의 思想的 가치의 수용에 있다. 바로 여기에서 먼저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한국사회가 수용하려는 민주주의의 가치체계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가지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思想的 價値體系로 다음의 성격이 지적될 수 있다.²⁴⁾ 첫째는 國民主權의 思想이다. 둘째, 基本權 保障을 들 수 있다. 세

23) Barry Hindess, *Politics and Class Analysis*, Blackwell, 1988, 진덕규 역, 정치학과 계급분석, 학문과 사상사, pp.27~31.

24) N. Bobbio, *The Future of Democracy Polity*, 1988, pp.98~117.

제, 個人的 自由를 確保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 사상적 가치의 수용이 민주주의를 수용하게 되는 기본적 의도이다. 그러나 嚴格한 意味에서 이러한 성격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념과 사실상 상치되는 일면이 있음을 認識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국민주권이라던가 기본권 그리고 自由의 意味는 비교적 경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韓國社會는 이러한 가치와는 기본적으로 상치되는 일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느 정도 造作的인 意味에서 論理化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해진다.

民主主義의 價値觀念

國民主權의 思想追求
基本權의 確保와 保障
價人的 自由의 確保

韓國社會의 傳統的 價値觀念

位階社會의 階級的의식에 의한 安定性 確立
共同體의 社會構成員의 責任意識
協同體의 獻身과 自己犧牲의 強調

이러한 대비는 자칫하면 의도적인 조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이러한 對比的 事實을 論議하려는 것보다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불일치적 성격이 쉽사리 발견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체계의 중요성이나 한국사회에 시급히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時代的 課題라는 식의 論議는 이미 확일적인 선택의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적 가치체계는 바람직하고,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그것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卽 價値體系는 相對的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各者의 觀點에 의하여 表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체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第1期: 民主主義 價値體系와 制度의 優越性 強調時期—이 시기에서는 주로 해방이후 부르조와 지배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를 최상의 가치체계로 國民들에게 注入시켰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민주주의는 最上의 理念이며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그밖의 다른 모든 문제들이 자연히 해소된다는 논리가 압도적이었다.

第2期：韓國社會의 傳統的 價値體系의 崩壞時期—이 기간은 대체로 1950년대 중반기에서부터 1960년대초까지 최고조로 나타났다.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아마도 이 시기의 가장 批判을 받았던 것은 한국사회의 大家族制度였고 祖上崇拜思想 그리고 촌락공동체의식 등이었다. 심지어 단일적인 문화구조나 의식까지도 억지로 미국식의 다원주의로 지향하려는 의도에서 분절화되는 傾向까지 보여주었다.

第3期：韓國社會의 價値體系의 혼돈기—이 시기는 대체로 197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으로서 전통적 가치의 붕괴와 서구의 商業主義文化 그리고 민주주의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成就意識에 의한 경쟁심리 등이 혼돈을 일으켰던 기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민주주의 그 자체도 정착될 수 없는 상황을 빚어 놓았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수용하기 위한 制度的 모방과 그것을 작의적으로 適用시킨 결과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치면에서 가치로운 것까지도 無散시켰으며 민주주의도 올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실로 이중적 損失을 經驗하게 되었다.

韓國에서 民主主義는 곧 제도적인 수용이나 移入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체계와의 接合에 있음을 제기시켜 주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한국적 가치관념에 의하여 재정합되어야 하고 그러한 정합은 制度的 基準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인식해온 종전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하다.

3. 民主主義의 展開와 價値體系

一般的으로, 政治制度를 단순히 경제사회적 반영체로 파악하려는 논의도 없지않지만 이러한 논의는 歷史決定論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곧 유물사관적인 역사인식으로서, 世界史의 普遍論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현실세계사의 다양성 때문에 적용상 논리적 한계가 없지 않다.²⁵⁾ 유럽사회에서 유물론적 역사인식이 그 나름의 분석적 방법이라면 다른 사회에서도 그것의 적실성을 그대로 適用시켜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확일성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經濟社會的 歷史認識이 일면적 분석논리일 수는 있지만 그것과 대치되는 文化的 認識論理도 하나의 인식기반으로서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수용과 전개를 文化價値觀念의 觀點에서 把握하기 위하여 먼저 서구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민주주의의 인식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된다. 유럽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전개를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논의하여 온 논리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即, 生産力의 發展이 生産의 社會關係를 변모시켰고 그러한 변모가 국가의 제도적 성격을 변화시켰다는 논리이다.²⁶⁾ 이 논리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生産力이 機械化로 올라가고 과학적 방법이 동원됨에 따라서 생산적 사회관계도 이것에 부응하여 이전의 봉건영주가 차지하였던 支配的 位置를 産業 부르조와지가 차지하게 되었고, 농노의 위치에 있었던 被支配階級은 시장에서의 임노동자로 전락됨으로서 사회구조는 부르조와지와 프롤레타리아의 2대 기본계급으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계급구조의 분화과정에서 새로이 대두한 부르조와지의 國家權力占有化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부르조와 지배계급의 도구로 기능할 수 밖

25) Howard Davis et. als., *Western Capitalism and State Socialism*, Blackwell, 1987, pp. 21~4.

26) Karl Marx, *Preface to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S.W. Vol I. Lawrence and W. Shnet 1962, p. 362.

에 없었으며 그러한 제도의 確立過程이 프랑스나 그밖의 다른 나라에서 發生하였던 市民革命이다.

물론 이러한 論理와는 對照的으로 막스 베버의 文化價值體系의 觀點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논의한 경우도 있다.²⁷⁾ 그가 프로테스탄트의 倫理를 통하여 企業家的 資本蓄積 그리고 창의적 기업활동을 설명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형성을 논의하였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合理性과 正當性을 전제로 하는 정치제도로서 議會制의 民主主義를 확립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이든 베버주의적 인식이든 그것은 보편적인 의미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 설명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는 역시 특정社會의 特殊性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수용을 설명할 경우 이를 經濟史的 認識위에 서서 논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지나치게 普遍主義的 認識위에 서게됨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의 단계성이 극히 미약한 사회로서,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생산력의 고착성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사회로서의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사의 단계론을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現代政治史에서 민주주의의 수용과 展開는 全般的으로 정치제도적인 수용과 그것에 연관된 가치체계와의 접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가 수용되었던 해방 당시의 성격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前近代의 農業中心社會였다. 비록 植民地時代의 軍輸工業이나 식민지적 종속산업이 존재하였지만 그것 자체가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격을 자본주의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다수 국민은 小作農民이었고 소수의 지주와 商工業者만이 存在하였으며 지주적 經濟聯關性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자유직 종사자로서의 醫師 辯護士 作家 등이 존재하였을 뿐이었다. 文化的으로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에 의한 영향력이 강하게

27)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Scribner, 1958 참고.

지배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權威主義의 儒敎文化는 실제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보다는 가족제도가 삶의 기반이었으며 개인적이기 보다는 집합주의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미 그것에 합당한 사회적 기반을 상실한 채 단지 지배 세력의 이익추구의 한 양식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既存의 社會構造나 가치체계와는 대립 관계에 설 수 밖에 없었다. 민주주의 수용 初期의 이러한 상황을 支配勢力은 그 뒤 계속해서 문화적으로는 多樣性을 상위적 가치체계로 설정하여 기독교의 전파와 민주주의적 연관성까지 강조하였으며 전통적인 가치나 제도를 제약하고 그것을 대치하기 위하여 美國의 社會制度를 급속히 모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도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실패될 수 밖에 없는 자기 제약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어느 면에서는 이 양자간에는 합일적 수용성을 추구할 수 없는 狀況이었고,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전개는 오히려 한국의 社會的 混亂을 加重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4. 民主主義의 영향과 政治統合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葛藤의 要因이 되었으며, 그것은 문화적으로 개인들에게 삶의 정당성과 그 가치관까지도 변모시키게 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가치배분의 심각한 갈등을 조성시켜 사회구조적 위기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影響力을 한국사회에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 政治的 影響: 지배계급의 권력구조의 정당성 결여는 민주주의를 합리화의 수단으로 동원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가치로 민주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실제로 存在하는 요소와의 갈등을 조성시켰다. 심지어 지배계급은 권력의 지속의 한 방편으로 냉전체제를 이용하여 국가위기를 내세워 민주주의에 실제적인 제약을 가하였으며, 이는 곧 국민적인 민주주의적 지지도

를 약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정치통합의 와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와해는 자연히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民族主義와 民主主義의 效果的인 접합관계조차도 설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도체계의 층원에서는 정상배적 職業政治人이나 軍部統治勢力의 權力獨占化를 가져왔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공동이익의 보장에서 벗어난 특수계층의 이익옹호로 귀속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권위주의체제로의 變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經濟的 影響: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발양되고 전개된다는 논지에서 급속한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추구된 결과, 자본가로서의 創意性이나 獻身性 그리고 청교도적 정신의 함양보다는 오히려 官權에 결탁하려는 기회주의적이고 졸부적인 천민자본주의의 속성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蓄積된 價値의 자본가적 독점은 사회에서 가치배분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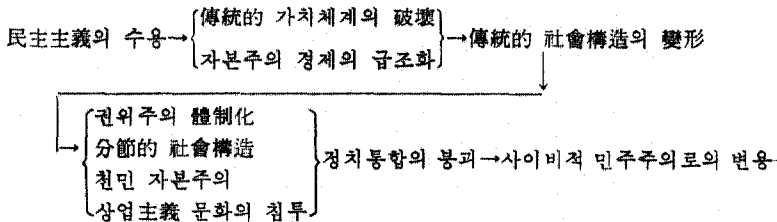
3. 社會的 影響: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른바 이익집단 중심의 정치과정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전통적 관념을 대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의 수용 이후 한국사회는 사실상 분절적 사회구조를 드러내었다. 또한 민주주의는 이른바 多樣性을 強調함으로써 변증법적 통합과정의 歷史的 經驗을 가지지 못한 한국사회를 분열적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4. 文化的 影響: 인간적 자기 절제와 공동체의 헌신성을 전제로 하였던 한국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수용 이후 전통적 문화구조는 상업주의적 문화로 변질됨으로써 파괴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천박한 서구문화의 非人間的 屬性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수용은 정치적으로는 派黨的인 權威主義體制로 변질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천민자본주의로, 사회적으로는 분절사회구조로, 그리고 文化的으로는 商業主義의 비인간적 문화양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역기능적 성격은 결국 政治統合을 와해시킴으로써 한국사회를 위

기로 나아가게 하였다.

政治統合은 흔히 지적되고 있듯이 정치사회 구성원의 정치체제에 대한 歸屬意識이다.²⁸⁾ 이 경우 그것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와 정치가들에 대한 信賴度 그리고 政策決定에 대한 자기 참여의 확신성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체제의 지지도는 곧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가에 대한 지지도는 기존권력 구조의 정당성의 인정으로 나타나며 이는 권력구조의 형성이 국민적 의사와 일치되고 있는가의 與否와 關聯되며, 政策決定의 효과가 일반 국민의 자발적 수용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동화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全般的인 過程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수용은 결국 政治統合을 위해서키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한국 사회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수용에 따르는 제도적 적실성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政治支配勢力의 의도적인 민주주의의 변용으로 변모되는 惡循環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회의감을 국민들 사이에 조성시키게 되었다.

Ⅳ. 韓國에서의 新支配勢力形成과 民主主義의 危機

韓國 現代政治史에서 민주주의는 마치 절대적 가치체계로 宣傳되어왔

28) Bingham Powell *op. cit.*, p. 27.

다. 그것의 실현만이 한국사회를 정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됐다. 그러나 지난날의 정치사적 전개과정을 되돌아 보면 한국에서 미국식의 민주주의의 단순한 제도적 수용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政治的인 갈등의 惡循環을 反復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국민적 정치통합에까지 문제점을 외면시켰고 그 결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불하고 있는 政治的 費用은 그것의 수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上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을 조성시켰던 민주주의적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韓國에서 政治的 危機의 分析論理

한국에서 민주주의적 정치위기를 조성시키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 점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된 수많은 논리들속에서 事實上 正確한 應答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것에 대한 應答을 찾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적 정치위기를 분석하는 논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官僚的 權威主義的 認識: 주로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된 관료적 권위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官僚와 軍部 將星의 혼합적 權力 獨점체제가 형성되어 민주주의를 한낱 가식적 제도로 전락시키고 權威主義的 暴力體制가 전개되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그 정당성을 산업화와 같은 경제적 성장에 의하여 논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이러한 논리는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관료적 권위주의와 한가지 차이점이 간과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관료군부집단의 경우 그것을 支援해주는 階級構造로 대지주와 자본가라는 동질적계급의 存在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군부와 관료는 사회계급적인 차원에서는 同一體라는 점이

다. 이점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관료와 군부는 동질적 사회계층적 기반위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論理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국민들의 政治文化的 水準과 文化와 人種的 多樣性, 그리고 宗教的인 면에서 카톨릭의 영향의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을 결여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類推的인 說明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논리적 적실성으로는 한계를 보여주게 된다.

2. 組合國家論的 認識 : 조합국가론의 논리는 產業化過程에서 양산된 노동자 세력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組合主義가 採擇되며 일면으로는 노동자의 정치 경제적 욕구를 차단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勞動貴族을 조성하여 정치적으로 지배계층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사실상 권력구조는 權威主義的 更直性을 보여주게 되고 사회구조는 심한 閉鎖性으로 나아가게 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가의 이익보장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적 관여가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만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위기를 설명하는 데는 그 적실성에 한계가 따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조합주의적 상황은 한국에서는 產業化가 어느 정도 전개되고 난 뒤에 이루어진 현상이었으며 이미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었으며 지배세력의 강압적인 탄압체제가 권력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3. 過大成長 國家論的 認識 :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적 政治秩序의 崩壞를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위기를 논의하였던 합치 알라비의 과대성장이론에 의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제시되었다. 즉, 地主와 官僚 그리고 매판적 기업세력이 연합하여 정치권력을 掌握하고 植民地時代에 발전된 行政官僚體制를 그대로 전수하여 통치함으로써 자연히 정치는 植民地的 屬性을 殘存시켜 중심부 국가에의 종속성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를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논리 역시 그 적실성에는 계급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밖에 新植民主主義的 認識도 민주주의의 갈등을 설명하는 논리로 원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른바 國家獨占資本主義論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한계를 파악하려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어느 일면의 설명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 발상의 근저에는 현실적으로 民衆主義的 鬭爭의 전략적 의도성이 지배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2. 新支配勢力形成論的 認識

위에서 설명한은 論理들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 자체는 일면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정치 내면적 속성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수용은 경제사회적 발전단계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당시의 경제 사회적 발전단계에서는 부르조와의 계급구조조차 제대로 形成되지 못한 형편이었으며 이들의 주도적 役割이나 影響力에 의한 민주주의의 수용은 고려될 수 없었다. 오히려 당시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세력은 지주와 일부 企業人들로서 그들도 식민지시대의 協力關係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解放 당시, 즉 민주주의가 수용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세력으로는 역시 전통적 지배세력으로 지주와 기업인들을 들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中間層의 位置에 있었던 知識人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階層構造에서는 중간층이었고 사회 속성에서는 지주와 같은 보수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직업구조면에서는 辯護士, 醫師, 敎師, 作家 等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지배세력인 지주나 자산가의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신지배세력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들에게 한가지 공통된 성격은 일본이나 미국등지의 유학생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서구적인 문화양식이나 정치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수용은 경제사적 발전단계에 의한 속성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의 중심부에 의한 공여였다. 이러한 공여된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립시켰던 것은 국민적 합의에서가 아니라 중심부적 연계망에 위치하였던 특정정치세력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들을 新支配勢力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전통적 지배세력이었던 식민지 시대의 지주나 자산가와와는 특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신지배세력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전통적 지배세력과 차이를 보여준다. 즉, 해방이후 미군정시기에 권력의 핵심구조에 함유되었던 지배세력은 전통적 지배세력이 다수였지만, 이미 이 시기에도 적지 않은 숫자의 신지배세력이 대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군정 시기의 한국인 고위 관직자중 조사 가능한 86명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²⁹⁾

- 지 주 : 34%
- 자산가 : 17%
- 중산층·자유직 : 11%
- 기 타 : 24%
- 미확인 : 14%

다시말하면, 식민지 시대의 전통적 지배세력의 존재양식이 주로 지주, 자산가, 친일관료의 3분야였다면, 이들 신지배세력은 중산층적인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 유학등의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관직을 점유할 수 있었다.

29) 여기에 사용한 통계는 陳德奎, 韓國現代政治史研究序說, 三英社(出刊豫定)에서 인용한 것임.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美軍政時代의 新支配勢力도 植民地 時代에서는 전통적 지배세력과 近親의인 연대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階級利益의 차원에서는 그들과 일치될 수 있었다.

또한 신지배세력은 李承晚 體制에서는 또다시 새로이 형성된 집단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다시 말하면, 美軍政 時代 權力構造의 중점직위를 점유 하였던 인사들 대다수는 이승만 체제에서는 權力構造에서 탈락되었으며, 단지 지속된 인사는 극소수에 不過했다. 이승만시대의 핵심권력층의 대다수는 새로이 中産層의인 사회배경에서 충원 형성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도 그 공통성이 자산가나 지주적인 특징보다는 중산층으로서 일종의 전문적 기능인의 속성을 보여 주었다.

새로이 대두된 이승만체제의 신지배세력의 존재는 자연히 이전의 전통적 지배세력과 미군정시대의 신지배세력의 연합체에 의한 비판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그뒤 朴正熙體制에서도 역시 權力構造의 形成에 新支配勢力의 성격을 보여 주었고, 탈락된 세력은 野黨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구조가 일반 국민의 통합적인 정치행위의 표출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배계급적인 정치세력간의 대결구조를 보여 주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들 지배계급적 정치세력의 권력장악 경쟁에서는 국민에 의한 지지와는 무관하게 주로 비정상적 정권 교체를 보여 주었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두가지의 합리화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 하나가 민주주의에 의한 정권의 합리화였다. 이 경우 민주주의는 국민적 통합이기보다는 단순히 권력지배자의 합리화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전의 신지배세력으로 탈락된 집단도 자신들의 권력경쟁과 도전을 민주주의로 논리화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정치세력간의 대립의 논리에 불과하였다.

둘째로 신지배세력의 형성에는 예외없이 권력구조의 정당성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심부 국가의 지원이 동원되었다. 한국의 정치체제가 냉전기

조의 산물이라는 속성 때문에 중심부의 영향에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성격은 신지배세력 자체의 권력기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었다.

세력으로 신지배세력은 권력구조를 점유함과 동시에 경제적 지원 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에 의하여 특정 기업에 편파적인 시혜조치를 강구하였다. 정치에 의한 경제세력의 형성을 도모하여 정·경연대를 이룩하고 있었다.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새로운 경제질서와 재계판도의 재편이 따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밖에 이들 신지배세력은 교육·문화매체를 동원하여 그들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에 의하여 합리화하는 특징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신지배세력간의 갈등은 1960년 4월 혁명에 의하여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그때까지 지배계급적 정치변동의 양상이 일반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의하여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그 뒤 한국의 정치는 사실상 지배계급적 정치세력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일반국민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그 뒤 5·16 쿠데타에 의하여 국민의 정치적 변혁 요구를 억압하고 여전히 지배계급적 신지배세력간의 정치경쟁으로 국한시켰지만, 국민의 정치적 욕구는 내면화하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더욱 첨예화하여 일반국민의 정치적 욕구는 이른바 민중적 변혁으로 전개되고 있다. 권력구조의 변동에 따라서 단절적이고 항시 새롭게 형성된 지배세력은 그들의 統治의 명분을 표면으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의 정치권력을 長期 獨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眞正성이나 국민적 통합감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喪失하였으며 지배세력은 지배세력으로서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되었고 저항세력은 저항세력으로서 民主主義를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는 각자의 명분적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國民統合의 신념체제가 보다는 사회분열과 지배세력의 통치합리화를 위한 論理였을 뿐이다.

3. 民主主義와 政治統合의 葛藤

새로이 정치권력을 점유하게 된 신지배세력은 언제나 그들의 政治的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민주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다. 이들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에 의한 자신들의 통치를 合理化하였다. 첫째는 이전의 통치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단죄론을 전개하였다. 즉 민주주의가 잘못된 이유는 이전의 지배세력의 反民主主義的 행위에 기인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와 동시에 과거의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임을 力說하였다. 둘째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제도의 창설을 도모하였다. 가령 朴正熙의 통치기에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변형을 내세웠던 것처럼 스스로 가장 적실성이 있는 民主主義를 主張하였다. 셋째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적 의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적 國民教育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사회교육은 물론이고 공교육에서도 새로운 內容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過程에서 특히 정치통합과 연관이 있는 것은 세번째 단계이다. 국민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분위기를 위로부터 강압적으로 展開 재편함으로써 마치 병영국가적인 경향이나 또는 국가주의적 性格까지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자발성은 거의 소진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는 국민속에 잠재하고 있는 要素中에서 반시대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내용이 적시되며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의 當面課題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성격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관습이거나 가치체계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韓國社會는 이러한 국민교육적 성향이 강조될 때마다 마치 뿌리뽑힌 사회로의 표류를 보여주게 되었다.

위로부터의 國民教育은 다른 의미로서는 새로운 가치관념이나 생활양식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서구의 生活樣式을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는 자본주의의 상업지향적 성격과 합치되어

상업문화의 난무를 촉발시켰으며 이것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대중매체의 영향이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主張할 때마다 서구의 천박한 상업문화의 수용시장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럴때마다 韓國社會의 국민적 정치통합은 사실상 와해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그 결과는 정치행위에서의 과격성을 미화하고 極端的인 사고와 행위양식 그리고 국민적 책임보다는 권력과 욕구의 분출을 강조하는 무정부적인 상황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바로 政治統合을 결여한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적시하게 되었다. 정치지배세력의 한계, 민주주의의 유사적 형태, 公敎育의 정치적 이용, 사회적인 국민교육의 자의적 의도성, 그리고 상업주의적 문화양식의 전파라는 일련의 性格들은 정치통합을 급속하게 붕괴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일반국민들에게 자기 확인의 기준이 되었던 전통적 價値와 유대감을 상실하게 하였고 객관적 가치기준을 마멸시켰으며 나아가서 정치적 극단주의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政治的 危機를 만연시키게 되었다.

V. 結論 :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그 수용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적인 필연성 보다는 狀況論的 불가피성에서 이미 한계적 내용을 함유할 수 밖에 없었다. 흔히 민주주의가 자발적으로 성장한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經濟構造 그리고 기독교문화양식, 과학적 생활구조 등의 정치적 합일과정이 빚어 놓은 결과였다. 이렇게 형성된 민주주의가 그 政治的 理念에서는 국민주권개념, 기본권사상, 개인주의적 자유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각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議員內閣制度나 大統領中心制 등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가령 미국만 해도 그들 사회의 다양한 속성을 전제로 하면서 각 지방의 고유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로서 연방제도와 권력분립주의에 의거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的 장치의 이론적 당위성으로서 이른바 민주주의의 엘리트 이론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自發的으로 형성 발전시키지 못한 이른바 수용적 위치에 있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수용에 적지 않은 問題點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의 경우 이러한 사정은 대단히 심각하였다. 전후 美國式 민주주의를 수용하여야 했던 아시아의 국가들, 예를들면 필리핀, 한국 일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3개국중에서 일본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그 이전에 민주주의를 經驗한 적이 있었고 그 나름의 국민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社會의 권위구조가 유지되고 있었고 문화적 동질성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통합감이 쉽게 확보될 수 있었다. 비록 日本의 민주주의가 보수 연대적 통치구조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로 국민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식의 民主主義로 전개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는 가장 표본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도입과 수용과정에 한계적 표본이 되고 있다. 사회구조의 특수성과 문화적 전통성 그리고 지배세력의 형성에서의 問題點을 도의시한채 단지 미국식 민주주의만을 수용하여 정당정치는 직업적 정상배의 派黨에 불과하였고 의회는 행정부의 추수적인 기관이거나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입법화의 기능으로 한정되는 성격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經濟構造의 상황과 문화적 성격을 무시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수용은 한국에서나 필리핀에서는 그 자체가 정치적 혼돈을 가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점에서 韓國에서 민주주의 특히 그 이념적 가치를 경시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수용은 어느 경우에서나 국민적 정치통합의 저해를 가져왔으며, 결국은 민주주의 그 자체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위기까지 深化되는 상황을 조성시켰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제도적 수용과 그것을 강화하여 통치권을 지속화하려는 신지배세력이 존재하는 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정치발전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위하여 다만 그러한 克服論理로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이념과 제도의 일치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만 지적해 두기로 한다.

첫째, 한국에서 民主主義의 정립을 위하여 민족적 욕구와 일반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 理念은 다시말하면 민족과 민주주의의 가치체계를 통합하는 사상체제라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는 그 기본적 사상을 전개하기 위한 制度가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색은 국민직접참여, 國民決定, 국민책임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롭게 모색되는 민주주의 제도는 정치가의 정상배적 可能性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합사회로의 지향을 강조하는 지역공동체적 정치단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全國的인 정치통합의 문제도 중시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서나 한가지 제기되어야 할 사실은 오늘의 미국식 민주주의, 이른바 그것은 민주주의 統治危機論의 상황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제 한국 등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에 의한 아시아 민주주의의 형태가 조성될 수 밖에 없는 時代에 직면하였다는 점이다. 즉 아시아 민주주의 형태의 정립이 아시아를 새로운 문명의 창조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歷史의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